

‘위험천만 낙하 간판’ 알고 보니 불법 옥외광고물

SOCIETY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주기적 안전점검·풍수해 점검 대상 빠져 ‘안전 사각’ 태풍 등 재난시 사고위험 커져…서구 일제점검 나서

광주 서구 도심 한복판 상가 건물에서 낙하한 간판이 ‘불법 옥외광고물’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에 취약한 불법·무허가 옥외광고물이 판치면서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인제(人災)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11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간판이 낙하한 위치가 커피 전문점 입구이자 인도와 인접해 있어 퇴근길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고 발생 후 상황 파악에 나선 서구는 떨어진 간판이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점

을 확인했다.

또 해당 광고물 이외 낙하 우려가 제기됐던 다른 옥외광고물도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는 점도 파악했다.

서구는 즉각 관련 광고물에 대한 철거 조치를 취하고 서구 내 옥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그 결과 서구 내 옥상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총 890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적법하게 신고된 광고물은 97개에 불과했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151개, 불법 옥상 옥외광고물은 633개로 조사됐다.

전체 옥상 옥외광고물 중 약 70%가 허가되지 않은 옥외 광고물인 셈이다.



지난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진 가운데 해당 간판은 불법 옥외광고물로 확인됐다.

옥외 광고물은 건물 밖에 설치된 간판, 현수막, 스크린 등의 광고물로 고층에 매달린 돌출 간판과 옥상 간판 등은 추락 위험이 커 종류와 크기에 따라 지자체에 허가,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신규나 연장 허가(3년 주기)를 위해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

의 경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 불법 옥외 광고물은 지자체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풍수해 대비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할 일부 지자체는 불법 옥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 현황도 하지 않은 채 방

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가 해당 사항 등을 방지하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안전과 사고 위험성에 비해 대처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구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5월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

광고물 관리팀장, 담당자, 옥외광고협회 민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자진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불법 옥외광고물과 파손과 낙하 우려가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철거와 수거에 나선다. 이를 미이행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과 불법 옥외광고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전남 초미세먼지 감소…공기질 개선

영산강유역환경청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분석

광주·전남지역 초미세먼지가 전국 평균 농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날 31일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부권(광주·전남·제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6.8㎍/㎥로 전국 평균 농도(20.3㎍/㎥)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 평균 농도는 전남 14.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치이며, 광주 19.8㎍/㎥, 제주 16.1㎍/㎥로 측정됐다.

또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좋은 일수(15㎍/㎥ 이하)는 3일이 증가(68일→71일)했고, 나쁨 일수(36㎍/㎥ 이상)는 7일이 감소(9일→2일)하는 등 대기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영산강청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로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효과를 냈다고 봤다.

수송부문에서는 광주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 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시내버스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산업부문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 등 29개소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으로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운영하고, 방지시설의 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했다.

생활부문에서는 공공사업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의 도로 청소관리상태 점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북구, 음식점 노후 주방 위생환경 개선

광주 북구는 음식점의 노후 주방시설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북구 소재 일반음식점 60곳이다.

지원에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청소 전

문 업체가 순차적으로 현장에 방문해 환기시설과 화구, 조리시설, 냉장고 등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위생과(062-410-6699)로 문의하면 된다.

이신하 기자 goback@



동구, 올해의 책 선포 21일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선포식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과 도서 선정단과 작가, 주민들이 선정된 책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광주 동구 푸드플랜 확정

3대 전략 45개 사업 본격화…조례 제정 등 공감대 확보

광주 동구가 먹거리 선순환 생태계 조성 위한 푸드플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이날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먹거리 TF 위원, 관련 부서장,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최종보고회는 지속 가능한 종합 먹거리 정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 전략과 제 중심의 실행 사업과 연차별(단기·장기) 로드맵 수립 순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2029년까지 ‘건강도시 동구’ 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 협치 체계, 지역 선순환 유통,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3대 전략과 45

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푸드플랜의 준비기로, 동구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동구 먹거리 위원회 운영, 인근 지자체 제휴푸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푸드플랜의 태동기인 내년에는 동구 먹거리 전담팀 구성, 건강 먹거리 포럼, 도시 텃밭, 마을사랑채 등을 활용한 먹거리 공동체 육성과 농산물 직거래 기반을 확대한다. 또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관심을 유도한다.

중장기 계획(활성기~성장기)은 선순

환 유통 체계 확립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업을 확대한다.

2027년부터 제휴푸드를 활용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나눔냉장고 설치 등으로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잡는다는 구상이다.

동구는 먹거리 지킴이단·서포터즈를 모집해 주민을 대상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우리동네 푸드마켓 설치 지원, 건강식단 꾸러미 배달 사업으로 추진해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녹색급식 인증제 도입, 스마트 먹거리 정보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해 영양 증진, 바른 먹거리 실천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

‘꼼수 감형’ 막자…광주고법, 양형기준 적용 논의

기습공탁·반성문 대필 등 우려…양형실무위원회 개최 피해 회복·재범방지 노력 등 기준 수정… 타 지역 확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법관들이 양형 요소의 공정한 적용 방안을 논의해 논 길을 끈다.

21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날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 양형

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광주고법 본원과 관할 지법, 지원 등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양형 이슈에 대한 양형위원회 대응과 양형 기준의 변화(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양형 기준의 일반되고 예측 가능한 적용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변선운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변론에서 보인 태도와 다르게 감형을 노리고 선고 기일 직전 피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받는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습공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다”며 “양형기준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요소를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뉘우침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뤄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진 경우 이를 양형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반성문 대필, 한시적 기부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노리는 패키지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판결문에 빈번하게 사용하던 ‘반성’이란 용어 자체가 많은 오

해에 직면하게 됐다”며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이란 양형 요소와 관련해 형사법령 인정 경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하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양형에 반영토록 양형기준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민아 광주고법 판사는 “때로는 피해 회복이 없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른바 ‘외상합의’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둘을 엄격하게 분리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요건은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한결 광주지법 판사 역시 “피고인이

응당 지급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설법식 광주고등법원장은 “현대 형사법에서 양형은 일정한 범위의 폭을 가진다는 ‘폭의 이론’이 확립돼 있는데, 개별 사건에서 그 범위 내에 있는 형량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형소심을 담당하는 고법 형사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 하급심에 바람직한 영향을 줌으로써 관할 지역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